

[오피니언]

월/요/광/장

박현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싸고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해 초 미국과 FTA 협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부터 협상이 타결된 지금까지 한미 FTA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미 FTA의 효과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매우 어렵다. 한미 FTA 이전에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으로서 미국, 멕시코, 캐나다가 맺었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경우에도 체결 이전에 경제적 효과에 대한 많은 분석과 전망이 있었지만, 실제 결과는 예측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수많은 변수들이 서로 얹혀 영향을 주고받는 국제협상에서 우리의 제한된 이성으로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중국에서 나비 한 마리의 작은 날갯짓이 대량을 건너 미국에 허리케인으로 될 수도 있지만, 주위에 작은 파동만 남기고 사라질 수도 있다.

한미 FTA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것도 우리가 그 효과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불확실한 요인 가운데서 밝은 부분을 강조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을 더 부각시키게 된다. 또 찬성하는 쪽은 반대론자들이 내세우는 부작용을 근거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반대하는 쪽은 찬성론자가 그리는 장밋빛 미래를 동상이라고 편집한다.

정부나 국책연구소 등의 설명을 믿지 않는다. 긍정적 영향을 과장하고 있거나 부정적 영향을 고소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심지어 정부가 중요한 협상내용을 숨기고 있다고 한다.

반대로 정부는 한미 FTA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근거 없이 피해를 부풀린다고 한다. 결국 서로 의견이 다른 정도를 넘어서 상대방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전제하면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기는 어렵다.

프랑시스 후쿠야마는 그의 저서 '신뢰'

한미 FTA와 신뢰사회

어느 쪽 주장이 옳은지 지금은 정확히 알 수 없다. 찬성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일방의 주장이 보다 객관적이고 진실에 가깝다고 하더라도 미래에 반드시 그 주장대로 모든 일이 전개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다. 지금의 조건 하에서는 타당한 예측일 수 있지만, 내일의 어떤 사건이 한미 FTA의 효과를 어떤 방향으로 변화시킬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어쨌든 하나님의 사건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현상이 그리 드문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도대체 갈등과 반복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자문하게 된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Trust)에서 신뢰가 한 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주장한다. 관습, 도덕, 협동심과 같은 사회적 자본이 경제에서 매우 중요하며, 신뢰는 사회적 자본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신뢰가 높은 사회에서는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반면, 신뢰가 낮은 사회에서는 상대방을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협력이 어렵거나 협력에 많은 비용이 든다. 이러한 비용은 결국 사회 또는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후쿠야마는 독일, 일본, 미국을 '고신뢰 사회'로, 중국과 한국을 '저신뢰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후쿠야마가 한국에 대해 서술한 부분을 보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쉽게 눈에 띄지만 한국이 가족 또는 친족의 윤태리를 넘어선 타인에게까지 높은 신뢰를 부여하지 않는 사회라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 결국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사회적 비용의 상당 부분은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신뢰는 투명성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저신뢰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고리는 정부가 먼저 끊는 것이 바람직하다. 때문에 한미 FTA 협상의 구체적 내용을 문제로 남기고 범위 내에서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필자는 기본적으로 한미 FTA가 우리에게 '기회의 창'을 열어준 긍정적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기회의 창'을 잘 활용하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겠지만, 그 열려진 '기회의 창'을 통해 들어오는 친바람에 몸을 움츠리고 감기몸살을 앓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기회의 창'을 여는 것이 비록 불가피한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라 하더라도, 친바람에 몸을 떠는 우리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 때 공동체 안에서의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더욱 커지고, 한국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이혼율 높은 농촌 국제결혼 대책 서둘러라

지난해 결혼한 전남지역 총각 4명 중 1명이 외국인 신부를 맞았다. 대법원이 지난해 국제결혼 및 이혼 건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남은 1만1천74건의 결혼 중 국제결혼이 2천512건(22.68%)으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20%를 넘어서었다. 우리 사회에 이제 국제결혼이 낮설지 않은 현상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하지만, 국제결혼 이hood은 급증해 전남지역 이혼율이 전국에서 제주 다음으로 높은 7.16%나 됐다. 다문화 사회로의 준비와 대책 마련이 더 늦출 수 없는 경지에 있다.

지난해 전남의 국제결혼 279건 가운데 남편과의 이혼은 67건에 불과했지만, 아내와의 이혼이 21건이었다. 이는 농촌 족각들이 국제결혼을 통해 배우자를 찾았다가 매매혼 등 비정상적인 혼인에 따른 피해와 사회적·문화적으로 겪는 부부간의 갈등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노 대통령 개헌안 발의 철회 잘한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말 역점과제로

내세웠던 개헌문제가 3개월여만에 일단락됐다. 청와대가 우여곡절 끝에 18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한나라당 등 각 정파의 합의를 수용,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 발의를 철회한 것이다.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강행했을 경우의 정국을 생각하면 아찔하다. 청와대와 정치권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며 긴장을 고조시켰을 것이다. 대선 정국과 맞물려 국론 분열이 가속화되며 소모적 정쟁으로 국력을 낭비할 수밖에 없었다.

노 대통령은 더 이상 개헌에 집착하거나 자신의 개헌안을 고집해선 안 된다. 개헌안 발의를 철회한 배경에는 냉철한 국민들의 반응도 고려됐을 것이다. 공이 차기 국회로 넘어간 만큼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국정현안에 전념하기 바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경제 활성화, 민생문제 등 현안은 산적해 있다.

없었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각 정파가 개헌 논의를 약속했지만 추진과정에서 사회적 갈등과 논란은 불가피할 것이다. 연말 대선과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서는 논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은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각 정파와 대선후보들은 개헌 내용과 시기, 일정 등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힌 뒤 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개헌 자체에는 공감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노 대통령은 더 이상 개헌에 집착하거나 자신의 개헌안을 고집해선 안 된다. 개헌안 발의를 철회한 배경에는 냉철한 국민들의 반응도 고려됐을 것이다. 공이 차기 국회로 넘어간 만큼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국정현안에 전념하기 바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경제 활성화, 민생문제 등 현안은 산적해 있다.

無等鼓

1968년 1월 23일 오후 1시 45분, 미국의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USS Pueblo)가 북한 조계정과 미그기에 의해 동해상에서 나포됐다. 푸에블로호는 저항했지만 승무원 1명이 사망했을 뿐 상황을 반전시키지는 못했다. 함장인 로이드 부커 중령을 비롯한 승무원 82명이 체포됐고, 푸에블로호는 원산항으로 끌려갔다.

초격대국 미국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 해군 100여년 역사상 처음으로 자국 함정이 납치되는 초유의 사태가 터진 것이다. 핵 항공 모함 엔터프라이즈는 동쪽으로 급파됐고, 오기 나와의 미군 전투기도 한반도로 전진 배치됐다. 제2의 한국전쟁을 우려할 만큼 긴장이 고조됐다. 누구나 당시 김신조 등 무장공비 31명이 청와대를 습격한 '1·21 사태' 직후였다.

북한은 푸에블로호가 영해를 침범했다고 주장했고, 미국은 공해상이라고 맞섰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칼자루는 북한이 쥐고 있었다. 11개월을 끈 협상 끝에 미국은 영해 침공을 사과했

다. 승무원들의 생명과 맞바꾼 것이다. 수모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북한은 푸에블로호 선체를 30여년동안 원산항에 얹류한 채 반미 선전용으로 써먹었다. 그러나 1999년부터는 아예 평양 대동강으로 끌고 갔다.

푸에블로호가 옮겨진 자리는 19세기 말 조선 군중이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 호를 불태웠던 것을 기념해 세운 '격침비' 바로 옆이다. 노동신문은 푸에블로호가 옮겨질 때 "미국과 전투를 벌여 19세기에는 '셔먼호', 20세기에는 '푸에블로호'를 전리품으로 만들었다.

21세기의 전리품도 여기에 가져다 놓으리라"고 썼다. 현재 푸에블로호는 북한 주민은 물론, 외국 관광객들에게도 필수 관광코스가 됐다.

북한이 최근 북한 방문한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 등 미 고위 관료들에게 푸에블로호 반환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북미 관계 개선의 정후로 봐야 할지, 북한의 또 다른 고단수일지 두고볼 일이다.

/오주승 정치부장 jsoh@kwangju.co.kr

법조칼럼



김상훈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문금주

협상의 왕으로 통하는 허브 코헨(Herb Cohen)은 그의 명지 '협상의 법칙'에서, 협상은 당신에게 무엇인가를 원하는 상대로부터 오히려 당신이 원하는 무엇(당신에 대한 호의·명성·자유·돈·정의·사랑·사회적 지위·신체적 안정) 등을 얻어내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그는 모든 협상은 결국 정보·시간·힘이라는 3요소의 해제모니 배분에 의해서 그 결과가 좌우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 4월 2일, 협상 시작 423일 만에 최종 타결된 한미FTA의 압축 협상단도 분명 위와 같은 허브 코헨의 협상에 관한 분석과 통찰을 사용하였을 줄 안다. '쌀과 같이 우리의 경제적 실익과 국민적 관심이 많은 분야에서는 마지막 선을

협상의 법칙

절차를 진행하였다.

단적으로 말하면 미국 측은 협상 체결절차에서부터 의회와 행정부의 유기적 협동의 결과물인 반면, 우리 측은 협상절차는 행정부, 동의절차는 국회라는 단독작업의 기계적 결합의 결과물에 불과하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 보면 통상 협정을 위한 통상위원회, 대표자자문위원회, 소관별 자문위원회, 전문가자문위원회, 국회의 조약추진동의권, 조약 영향평가의 시행, 국회의 재협상 요구권 등을 담고 있는 통상협정의 체결절차에 관한 법률안(2006. 2. 2일의, 의안 번호 제3849호)은 매우 의미 있고 속히 시행되어야 할 법령이라고 본다. 우리는 지난 한미FTA 체결절차에서 대책 없는 국론분열을 충분히 경험했고, 앞으로 체결을 준비 중인 EU, 중국, 일본, 남미 등의 FTA는 합리적 대책의 정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미FTA 협상절차, 특히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의 조직적 결성·분신자살·단식농성·촛불반대집회 등과 같은 반대 여론을 지켜보면, 소위 테크닉으로 해결될 수 있는 절차체계에 대한 아쉬움과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그것은 통상협정 체결이라는 표본으로 통한 국민적 공감대의 집합체계, 통합체계일 없거나 그 체계 필요성을 경시하는 관점에서 비롯된다고 믿는다. 따라서 우리 측 협상단이 거둔 소위 '테크닉의 성공'으로 만회되거나 담보될 수 없는 영역이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 측은 1974년 무

〈변호사〉

투자유치, 지역민 모두가 나서야

44.4%)

이러한 실적은 우리시가 이제 명실공히 과거 소비도시에서 자동차·디지털 가전·광산업 등을 기반으로 한 생산도 시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우리지역은 수도권에서 원거리에 있는 내륙도시라는 지리적 불리함, 미흡한 SOC로 인한 물류비용 부담 등 투자여건에 있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수한 인적자원과 깨끗한 환경, 지역민의 경제 활성화에 대한 열망 그리고 무엇보다 민선3기 이후 첨단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식기반산업에 적합한 한국기술원, 한국생산기술연 구원, 고등기술연구소, 전자부품연구원, ETRI 광통신연구센터 등 R&D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술, 장비, 인력의

업에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긍정적인 힘을 실어주어야 하고,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친기업 정서 및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라는 이미지 확산 등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데일 카네기, 짐 쿠리스 등 조직과 개인의 성공학을 연구한 사람들에 따르면 성공의 비결은 특별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린 만큼, 노력한 만큼 거둔다'는 자연 법칙과 일맥상통한다.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강점을 잘 활용하여 성장의 동력을 다시 활기차게 돌리는 일이며, 행정기관이나 지역민 모두 자신감을 가지고 긍정적 차원에서 지원과 힘을 모은다면 광주경제는 분명 희망 쪽을 향하게 될 것이다.

〈광주시 투자유치기획단장〉

위화감 주는 예능 실기 수업·평가방식 바꿔야

학교의 예능수업과 평가방식이 바뀌었으면 한다. 아이가 시험불패만 되면 음악과 미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음악 시험을 볼 때가 다가오면 음악 악보와 선생님은 "기말고사 끝나고 바로 실기시험을 볼 테니까 준비해라"라고 한다. 한다는 것이다.

수업 시간에는 유명한 클래식 음악을 듣거나 노래를 적당히 듣는 것으로 수업을 진행하는데 대체로 악기 연주법이나 발성 방법에 대한 교육은 많지 않다고 한다.

그리고 시험 당일이 되면, 어떤 학생들은 피아노·첼로·클라리넷 등의 악기를 멀티에게 연주하지만, 그런걸 사교육을 통해 배

우지 못한 학생들은 누구나 다 하는 평범한 악기 하나조차도 찔찔 맷수밖에 없다.

미술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선생님이 주제를 정해놓고 평가하지만 어릴 때부터 수업료가 비싼 음악, 미술 학원에 꾸준히 다녀온 학생들만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밖에 없고 가정 형편이 여의치 않은 학생들이 부유층 아이들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이같은 위화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고려한다면 음악, 미술 과목의 수업방식과 평가방식이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닌가.

▲ 정점수·목포시 대양동

외국시험에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자체 영어시험 개발을

장까지 토플과 토익시험 접수만 인정하지 말고 우리 토종 시험을 받아줘야 한다. 서울대에서 만든 텁스 같은 시험도 있고, 그게 미흡하다면 전국 대학이 공동으로 개발해 되지 않나? 국내 주요 대학들이 공동으로 시험을 개발하고 정부나 기업 등에서 지원해주기만 한다면 순수 토종 영어시험에 대한 교육은 많지 않다고 한다.

이제 우리 스스로 토플시험에 매달리지 말고 우리의 힘을 키워야 한다. 국내 영